

건설 규제 개혁 체감도 ‘제로’, ‘땅따먹기’식 유인 규제 혁파해야

- 업역 칸막이로 인한 폐해 여전, 셀프 규제 혁파 시스템 구축이 관건 -

한 상 준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전문위원(대한건설협회 부장)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 중 하나이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촘촘한 규제가 불가피한 다소 독특한 산업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과거 정부의 필요에 의해 탄생하고 정부 주도로 성장해 와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도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다소 전근대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 발전이 지상 과제였던 1950년대 말에 「건설업법」이 제정되고 고도 성장기를 거쳐 오면서 규제 위주의 체질은 변치 않고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추세가 상당 부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질화된 정부 주도의 산업 운영 시스템이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금과 같은 건설산업의 체질을 속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건설 잔존 규제 - 칸막이식 업역 구조

건설산업에서 대표적인 규제를 뽑으라면 끝도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칸막이식 건설 업역’을 들 수 있겠다. 건설업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

업으로 나뉘어 있으면서 또 다른 건설업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문화재수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은 각자 개별법으로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철저히 하리만큼 칸막이를 쳐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역 칸막이로 인한 폐해는 너무나 많다. 치열하리만큼 서로가 시장 잠식을 노리면서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직접시공’ 등을 둘러싸고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새로운 시장 창출에 힘을 쏟기보다는 남의 시장을 넘보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셈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건설업이 한 치를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다.

일례로, 건물 노후 표면을 콘크리트로 보수하는 공사를 두고도 같은 전문건설업 내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서로 자기 영역이라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유사한 다툼이 여기저기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건설산업 발전·성장의 출발은 ‘업역 통합’

그간 건설업 선진화니 경쟁력 제고니 건설산업을 위한 각종의 구호를 쏟아냈지만 성과 없이 끝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 경제

“보세공장·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및 지역현장 규제 애로해소”



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현장의 절박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민간 또는 외부인이 규제를 검토하여 혁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난 데에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둔 채 개선을 꾀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작금의 건설업 현실을 ‘땅따먹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부정하기 어려운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한다.

자꾸 업역 중심으로 분화되면 건설업이 종합화가 안 되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대규모화·복합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해외에서도 종합 건설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종합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건설산업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건설산업 발전·성장의 출발은 건설 업역의 통합이다. 이를 내버려두고 다른 것을 손대 산업을 키워보고자 하는 시도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 거의 ‘제로’

‘규제 개혁’이란 작업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최소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규제 개혁’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일선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온다. 바쁜 업무와 추구하는 정책 목표에 갇혀 있다 보면 현장의

요구나 상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해답이 나올 수 없는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규제를 공무원이 편리한 방식으로 푸는 경우도 많고, 규제 개혁의 품질보다는 건수를 늘려 수용률 높이기엔 집중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그렇기에 현장에 나가 보면 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거의 ‘0’에 가깝다.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현 규제 개혁 시스템의 미비에 있다. 규제 개혁을 한시 조직으로 추진한다거나 독립적 지위를 부여받지 않고 추진하다 보니 당장의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보다 솔직한 인식일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아니고, 게다가 규제를 스스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역할이 없어 한계가 있다.

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우선, 당국자들이 국민·기업들과 완전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즉, ‘빙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현장의 절박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이것이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동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민간 또는 외부인이 규제를 검토하고 심의·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 규제를 평가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칭 ‘정부규제 국민평가단’을 만들어 이러한 기능을 수행케 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시스템만 갖추더라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다니고 개선하고 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야말로 셀프 규제 혁파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면 규제 정비 작업이 굳이 지금처럼 힘들이지 않고도 훨씬 효율적으로 척척 진행될 것이다. **END**